

野 “與 ‘조작 기소 국조’, 李 公소 취소 빌드업”

“선거 앞두고 ‘프레임’ 악용
 대장동 공범들 중형 선고
 ‘법외국죄’는 자승자박될 것”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수사’ 프레임만 만든 뒤 공소 취소로 이어가겠다는 수순”이라고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보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당연구원 부위원장 금융수사 ▲쌍방울 대박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을 포함한 총 7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상당수 이미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관련자들이 대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검찰 뿐 아니라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은 물론 대법원과 각종 법원까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라며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국회가 정치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 기간도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초까지 50일로 설정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조작수사’ 프레임용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판에 관여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해 정치 권력을 강요하는 행태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화재 현장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인 21일 내 인생파헤를 내 대대국 공판 화재 현장 방문에 피해 상황과 실종 등 대대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도착해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시간대별 화재 상황과 사망자 등 인명 피해 현황 등을 보고 받고 “건물 진화가 무너져 있는데(실종자들) 어떻게 찾을 것인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붕괴 지점의 외벽을 보며 “다 녹았다”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잘 챙겨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는 거대 여당의 의결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의 유무는 오직 법과 증거,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압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일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며 “역사는 권력이 사법을 지우려 했던 이 순간을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는 무리수를 던졌다”라며 “국민들은 조작기소의 의혹 진상 규명을 내세우지만 공소 취소라는 결론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정치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대대국 모함까지 꾸러 사법 체계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장동과 대박송금 사건에서 공범들이 이미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대통령만 조작 기소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판결문에 수백만 언급된 이름을 못 본 척하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는 확신과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무리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대장동 혐소 포기하고 공소 취소 거세실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불리한 사안은 배제할 채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소 취소 시도는 자신들이 만든 법 외국죄에 해당해 결국 자승자박 자기감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가 한 사람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는 사법질서 훼손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있었던 진실은 지울 수 없고 국민이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당하게 재판에 일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정권 정지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전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정특위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지행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정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국정조사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대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최대 500만원 지원

경기도, 제조 中 50곳 접수

미국·이란 정쟁 발발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2026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중동지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 수출신고 실적에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국제 해상·항공 운임, 창고료 등 물류비 총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기반의 1차 평가(경영·정성)와 2차 물류 서류 적격 평가

및 중점 수혜 회사를 거쳐 총 50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단순 비용 보전을 넘어 중동 시장에 거래 지속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정쟁 상황 속에서도 도내 기업이 기존 바이어의 거래를 유지하고 신규 수주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내 제조 중소기업들이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동 시장에서의 수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비관세장벽 대응, FTA 활용 지원 등 후속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31일 오후 4시까지다.

수원·재정주 기자 gjs7749@siminilbo.co.kr

서울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제로웨이스트 매장 325곳 모집

서울시가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지원을 나선다.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생활용플라자(성동구 용답동)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4월10일까지 2026년 ‘서울제로마켓’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신규·기존 매장을 합쳐 총 325곳이다.

이번 사업은 생산·유통·소비 전단계에서 포장재기물을 줄이고,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 실천을 일상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울에 사업 거점을 둔 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대화용 배달박스, 무포장, 포장재 간격, 소분 판매, 리필스테이션,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 6개 유형 가운데 1개 이상을 운영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매장별로 12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대화용 배달용기 대체와 대형 인건비를 비롯해 친환경·대비용 포장재 구입비, 교육비, 홍보비, 소분·리필스테이션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임차비 등이다.

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분·리필 방식 판매 등을 실천하는 매장 675곳을 ‘서울제로마켓’으로 선정해 지원해 왔다.

이재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영종~청라 도로명 ‘청라하늘대로’

인천시, 청라하늘대로 명칭 반영

인천시가 최근 ‘202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종~청라 연결도로’ 도로명칭을 ‘청라하늘대로’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도로구간은 중구 송산동 1097-600에서 시작해 청라하늘대로를 거쳐 서구 청라동 101-11까지 연결되는 총길이 8.1km 구간이다.

이제모 도로명 후보로는 ▲중구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인천국제도시대로’ ▲서구가 청라하늘대로 지명을 반영한 ‘청라하늘대로’ ▲인천시가 제안한 ‘국제미래대로’

3개 인이 상정됐다.

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시민 선선도 조사 결과와 각 지자체체의 제안 발표 내용, 도로명 부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라하늘대로’를 선정했다.

‘청라하늘대로’는 청라하늘대로의 명칭을 반영해 위치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도로의 예측

성과 활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담았다는 점이 주요 선정 사유다.

아울러 이날 심의에서는 ▲중동군과 중구가 동일하게 제안한 ‘영종~신도 연결도로’는 ‘평화대로’로 ▲연수구와 남동구가 공동 제안한 ‘송도위더프린트~송진 연결도로’

는 ‘포이들길’로 각각 의결됐다. 이번 심의는 의결된 3건의 광역 도로명칭 상위기관의 발도 제심 절차 없이 인천시 고시를 거쳐 주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된다. 이후 지도, 내비게이션, 공공정보시스템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인천·문체부 기자 mcs@siminilbo.co.kr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허브 IFEZ
**글로벌 항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IFEZ**

ifef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CHEON

글로벌비즈니스
**혁신 허브
 IFEZ**